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5면	[강원포럼] 강원자치도 키워드 '민생·안전'	1
江原日報	03면	선거구 확정 또 불발 ... 속타는 출마자들	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주문진중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2
江原日報	04면	강원자치경찰위 2기위원 전대양·최지봉 추천	3
강원도민일보	05면	친일인사 비석·교량명 버젓이...더디기만 한 청산 작업	3
강원도민일보	20면	한림성심대 지역협력위원회	4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4
江原日報	22면	태극기 물결 분위기 고조 3·1절 105주년 기념상도	5
江原日報	23면	“청년농업인 소통·화합 통해 농촌 소멸 대응에 앞장”	5
강원네트워	온라인	석화초?홍천중, 학교이전 적지 활용 방안 토론회 개최	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7
江原日報	23면	[동정]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영월)	7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7
강원도민일보	14면	홍천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8
江原日報	02면	'고령화 여파' 속초 대표 봄꽃 축제 폐지	8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저출산 쇼크' 현실화	9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 합계출산율 0.9명 붕괴 인구절벽 가속화	9
강원도민일보	20면	3·1절 맞아 춘천고 독립유공자 7명 대통령 표창	10
江原日報	04면	낙엽·이끼로 가려진 민공호 의병장 이름	10
江原日報	21면	‘주거·육아·일자리’ 청년농업인 살기 좋은 정선 박차	11
강원도민일보	16면	화천군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 탄력	11
江原日報	18면	안인항 모래 퇴적 현상 ... 어민 수일째 발 묶여	12
江原日報	07면	수주액 1년새 2조 급감 강원건설 비상	12
강원도민일보	09면	지역인재 머무는 '교육도시 춘천' 힘 받는다	13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시 통합 돌봄·융합인재 양성 '날개'	13
강원도민일보	14면	인제군 향토음식 강화 여름축제 준비 속도	14
江原日報	17면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시동	14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시 국가산단 예타통과 정부협조 요청	15
강원도민일보	13면	동해 해군작전헬기장 조성 착수 주민 반발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전 안전 예산 삼척 지원 마땅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신중하길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 민의 수렴되겠나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잇단 담뱃불 화재, 실종된 흡연자의 안전 의식	19

江原日報

2024 02 29 ()

25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628년 만에 변방의 족쇄를 벗고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올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로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그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농지·산림·환경·군사 4개 분야의 규제를 '확'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2차 특례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지역별 특례를 비롯해 동해안 어업·수산·해양·항만 관련 특례 등이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치조직권을 비롯한 의회 1인 1보좌관

제 등 의회자치권 독립 특례안 통과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못지 않게 시급한 과제는 바로 민생 안정과 도민 안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굴과 실천 방안의 마련이다.

강원자치도의 민생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도의 수출액은 11개월 만에 2억 달러 미만, 무역수지는 3억582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2023년 11월 기준 도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0%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

강원포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고 이에 따라 파산기업 수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노랑우산' 폐업 공제의 지난해 지급 규모는 2022년 대비 51.4% 급증한 3,728건, 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안자망 등

강원자치도 키워드 '민생·안전'

해안 어민들은 어자원 고갈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미리와 도치까지 안 잡히고 있다.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3톤으로 최근 3년 평균 107톤의 2.8% 수준이며 양미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07톤의 절반 정도인 261톤을 잡는 데 그쳤다. 도치는 사실상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수준이다.

도민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행정안전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예방대책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자살' 분야 안전 지수 등급은 전국 최하위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21년 기준 국가 평균 26명을 크게 웃도는 32.7명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 위험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일 정도로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근본 처방이 절실하다. 여기에 2023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강원도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24년 도약을 위해

서는 민생 안정과 도민 안전, 삶의 질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천 의지,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4·10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부흥과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 도약의 해법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약을 위한 3차 특례안 통과 역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총선에 거는 기대도 높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강원자치도 국회의원 후보들 모두께서는 오직 도민들의 민생 안정, 도민 안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법과 대책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4 02 29 ()

03

江原日報

선거구 확정 또 불발 ... 속타는 출마자들

총선 40여일 앞 혼란 ... 공천 재신청 기대·백지화 요구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 이 선거를 40여일 앞두고도 결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28일에도 총선 선거구 확정 협상에 실패한 가운데 출마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혹여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확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새로 바뀐 선거구에서 이름과 얼굴을 다시 알리고 전략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주자들의 경우 선거구 확정 결과에 따라 지역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국민의힘 허인구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예비후보는 28일 입장문을 내

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등 영서와 영동지역 6개 지역을 하나로 묶겠다는 발상은 총선 주자와 지역 유권자들의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컷오프된 예비후보들 역시 선거구 확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강릉지역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오세인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선거구 확정 후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컷오프된 국민의힘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확정안대로 춘천이 단독 분구될 경우 공천을 재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일부 주자들은 기존 선거구 안으로 실시한 공천 결과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4년마다 제기된 문제가 또 반복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은 “진작 강원자치도의 의석수를 늘렸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4 02 28 ()

江原日報

[포토뉴스]주문진중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주문진중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28일 주문진문화교육센터에서 권혁열 도의장, 조대영.허병관 시의원,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김원석 회장이 취임하고 김광래 전임 회장이 이임했다.

2024 02 29 ()

江原日報

04

강원자치경찰위 2기위원 전대양·최지봉 추천

결격사유 없을 시 확정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위원 구성 절차가 본격화(본보 지난 16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강원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 2명 추천 권한을 가진 도의회는 2기 위원으로 전대양(65)가 톨리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지봉(64) 전 양구경찰서장을 선정했다. 이들은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위원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임명이 확정된다.

전체 7명인 자치경찰위원 중 2명이 선정된 가운데 나머지 5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넘겨받아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명수(70) 위원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대양 교수



◇최지봉 전 서장

나머지 4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도교육감이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 추천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5개 기관(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 춘천지법,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명씩 참여해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 방식 등을 논의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다음 달 8일까지 후보 추천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점에 2기 위원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신하림기자 peace@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05

천일인사 비석·교량명 버젓이...더디기만 한 청산 작업

내일 105주년 3·1절

장현근 모성비·백일교 명칭 등
도내 일제잔재 유·무형 흔적 여전히
조례 제정 불구 실질적 성과 전무



춘천시 후평동 교동향교에 위치한 장현근 모성비. 장현근은 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105주년 3·1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강원도내 천일 잔재 청산 작업이 더디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지만 아직 위원회를 통한 발굴이나 사업 추진은 없는 상황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는 지난해 최승순 도의원 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행위로 강원도내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흔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홍보, 청산작업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당시 최 의원은 "도내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와 청산으로 우리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이용 13대 강원도지사의 천일인명사전 등제사실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하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를 운영해 추가적으

로 관련 사업을 발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는 현안이 많다보니 후순위로 밀렸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지 정리지 않았다"고 했다.

도가 미적거리는 사이 도내 곳곳에 일제 잔재는 만연하다. 강릉에서는 천일인사로 분류된 김백일 장군의 이름을 딴 '백일교'도 여전히 교량명으로 사용되고 있고, 춘천 후평동향교내에 있는 '장현근 모성비'도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다. 장현근은 청령의 일본군 지원과 창씨개명을 독려하는 등의 활

동으로 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하지만 해당 모성비 옆 표지판에는 '일제강점기 춘천군수로 재직하며 유학을 발전시키고, 향교발전에 공헌한 장현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비'라고만 쓰여있을뿐 그의 천일행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강원도는 조례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니 올해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됐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23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강원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설치

법률자문·공간 활성화·긴급지원 등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20



한림성심대 지역협력위원회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지역협력위원회가 28일 한림성심대 국제회의실에서 문영식 한림성심대 총장,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양숙희 도의원, 김운기·지승민 춘천시의원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 도내 예술인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복지 강화에 나선다.

강원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내에 마련된 이 센터는 지역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그간 진행했던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생활밀착형 지원책 등을 발굴, 확대해갈 방침이다. 센터 업무는 3명의 실무자가 맡아 진행한다.

각종 예술인 지원사업 공모 접수 등에 필수적인 예술인활동증명 등록과 관련, 찾아가는 등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자문 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예술인 창작활동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및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 지원사업 △예술입문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희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장은 “당장은 재단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존 예술인 교육과 복지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예술인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 만큼 예술인들과 만나 실제로 필요한 정책 수요도 적극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앞서 심오섭 도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구성요건이 마련됐으며, 최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4 02 29 ()

22

화천군

태극기 물결 분위기 고조

3·1절 105주년 기념상도

화천군민과 군장병 등 2,000여명이 '힘내라 화천경제, 달려라 화천관광'을 염원하며 질주한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화천군과 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화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3월1일 오후 1시 화천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출발 장소인 NH농협 군지

부 앞 거리에는 태극기 물결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달리기대회 참가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김진호 7사단장, 박대현 도의원, 이주환 화천경찰서장, 최임수 화천소방

서장, 봉운일 NH농협화천군지부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등이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레이스를 펼친다.

남녀 1~5등에게 상품이 주어지고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는 31등상, 105등상 등 각 기관·단체에서 협찬한 다

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최문순 군수는 "애국충절의 고장 화천에서 매년 3월1일 뜻깊은 레이스가 펼쳐진다"며 "독립정신 계승은 물론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힘차게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장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 02 29 ()

23

“청년농업인 소통·화합 통해 농촌 소멸 대응에 앞장”

도4-H연합회 제65대 신규임원 출범 ... 남영준 회장 연임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4-H연합회가 올해도 농업 현장의 혁신, 농촌 소멸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4-H연합회는 28일 도 농업인단체회관 3층 회의실에서 도 임원과 각 시·군 대의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대 신규 임원 출범 및 2024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영준 회장이 연임됐고, 남 회장에 이어 한동균(횡성) 남부회장도 임원을 다시 맡게 됐다. 이민서(홍천) 여부회장은 새로 취임했다.

남영준 회장은 "4-H 청년

농업인과 적극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지역·노·체 4-H이념을 실천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강원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농업의 미래에 4-H청년농업인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함께 참여해 4-H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이재석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강원자치도 4-H 연합회 제65대 신규임원 출범 및 연시총회가 28일 춘천 우두동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남영준 회장,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 최중수 도의원, 이재석 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강원농업의 정책 추진 공간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만큼 4-H청년농업인과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 당선인은 "4-H는 지금까지 자타 공인 농업발전과 국가발

전에 이바지해온 조직"이라며 "리더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힘쓰다면 앞날에 분명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2024 02 28 ()

/ /NIE

석화초?홍천중, 학교이전 적지 활용 방안 토론회 개최

학교이전 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의 장 마련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철홍)은 지난 27일(화)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이전 적지 활용 방안 관련 협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존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 홍천군의회 용준식 의원을 비롯한 석화초·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학교부지 활용 방안으로 △홍천군 지역스포츠센터 설립 △학생 문화공간 활용 △기존 학교부지 매각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28일(수)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5차 협의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이영욱 의원은 “학교이전 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되어 기쁘다”라며,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석화초·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민철홍 교육장은 “조속히 홍천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정훈 기자

2024 02 28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영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열리는 연구원 제5회 법포럼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 박호균(강릉).최종수(평창).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9일 오전 11시10분 하나로마트 강릉농협성남점에서 열리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3월1일 오전 11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2 29 ()

23

◇김길수강원특별자치도의

회기확행정위원

장(영월)은 29일

오후 2시 강원연

구원 리버티홀

에서 열리는 연

구원 제5회 법포럼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11

심오섭 도

의회 사회

문화위부

위원장은

1일 오전

11시강릉아트센터소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

105주년 3.1절 기념

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14

홍천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공군오)는 지난 27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홍천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적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열띤 토론 속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인상결정에 따른 추가 의견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박영록 군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당대당 대립구조로 이어온 행태를 벗어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는 점, 홍천지역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의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승현

江原日報

2024 02 29 ()

02

'고령화 여파' 속초 대표 봄꽃 축제 폐지

고령화 여파로 속초지역의 대표적 봄꽃 축제인 '상도문마을 벚꽃축제'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소득 사업으로 이어왔지만, 더 이상 축제를 치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상도문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마을 벚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2009년 처음 개최한 이래 15년 만이다.

상도문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실

상도문마을 벚꽃축제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축제 인력 부녀회 회원 대다수 70~80대 진행 역부족

질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마을부녀회 회원들이 70~80대여서 매년 1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힘에 부치고, 청년들도 없어 축제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축제가 끝나면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계속 이어질 정도여서 축제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

민들의 설명이다.

상도문마을 벚꽃축제는 농촌문화 체험과 어린이 사생대회, 농산물 전시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각광받았다. 2018년까지 10회 운영됐고, 2019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축제를 재개했었다.

시에 따르면 상도문마을의 전체 인구는 34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17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축제장이 설악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도로변 빛나무가 꽃 터널을 이루는 데다 야간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화려한 야경이 연출돼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령화 여파로 이제는 수려한 경관의 축제를 볼 수 없게 됐다.

박성균 상도문마을 통장은 "아쉬움은 크지만 대체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2024 02 29 ()

강원도민일보

01

강원도 '저출산 쇼크' 현실화

지난해 합계출산율 0.89명

사상 처음으로 전국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한 가운데 강원지역도 0.9명대가 붕괴되는 등 강원도내에서도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갱신했고 강원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8일 본지가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강원지역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전년 (0.97명) 대비 0.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0.65명)은 상회했으나 통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역대 처음으로 0.9명대가 붕괴된 것이다. 강원도에서도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되며 저출산 대비와 함께 실질적인 관계인구·생활 인구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합계출산율 0.6명대 역시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정우진

▶ 관련 기사 6면

2024 02 29 ()

강원도민일보

06

강원 합계출산율 0.9명 붕괴 인구절벽 가속화

작년 도내 합계출산율 0.89명

출생 < 사망 자연감소세 지속

5개월 연속 인구 순유출 현상

사상 처음으로 전국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한 가운데 강원지역도 0.9명대가 붕괴돼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

28일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전년 (0.97명) 대비 0.08명 줄었다. 전국 합

계출산율 (0.65명)을 상회했으나 통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역대 처음으로 0.9명대가 붕괴됐다. 전국 역시 0.6명대는 사상 처음으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다만 강원지역은 세종과 전남 (0.97명) 다음으로 높으며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강원지역 조출생률은 4.4명으로 전년 (4.8명) 대비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4.5명)을 하회했다. 반면 도내 조사망률은 9.3명으로 전년 (9.9명) 대비 줄기는 했으나 전국 평균 (6.9명)을 상회했다. 강원지역 조사망률은 전남 (11명), 경북 (9.9명), 전북 (9.8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출생아 (6700명)보다 사망자 (1만 4200명)가 많았으니 7500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세는 2014년 (-342명) 이후 10년째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올해 1월 강원지역을 떠난 전출자도 1만 8293명으로 총전입자 (1만 7513명)를 뛰어넘으며 780명 차이가 났다. 지난 9월 (-202명)부터 5개월 연속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1월 기준 삼척이 286명이 떠나며 가장 많이 감소했고, 춘천 (-165명), 강릉 (-134명), 철원 (-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증가에 나서고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출생아 수와 기존 주민 유지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20

3·1절 맞아 춘천고 독립유공자 7명 대통령 표창

박일환·이철균·최상기·정인옥

이창우·남극원·이유직 포상

“개교 100주년 명예졸업장 추서”

춘천고 재학 중 항일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7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된다.

국가보훈처는 105주년 3·1절을 맞아 1938년 상록회 사건으로 투옥됐던 박일환 선생 등 6명과 1941년 춘천중학교 생도 치안유지법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른 이유직(훙성공보 졸업) 선생에게 각각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록회 사건 관련, 포상자는 박일환(평남 성천공보 졸업), 이철균(함남 가평공보 졸업), 최상기(화천공보 졸업), 정인옥(홍천공보 졸업), 이창우



춘천고 학생들이 구성한 항일 비밀 결사조직 '상록회' 단체사진. 28일 대통령 표창에 추서된 7명은 단체사진 속 회원들의 1년 선배로 이들과 함께 활동하다 투옥됐다.

(강원 통천 고저공보 졸업), 남극원(간성공보 졸업) 선생이다.

박일환 선생은 춘천고보 5학년때 상록회 회계로 활동했고, 해방 후 서울 보성중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최상기 선생도 춘천고보 5학년 시절 상록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해방 후 강원

론계에서 활동했다. 이철균·정인옥·이창우 선생은 모두 투옥 후 춘천고보 3~4학년 재학중 퇴학당했다.

이유직 선생은 1941년 이른바 '춘천중학교 생도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일제에 구속됐다. 춘천고보 5학년 때인 1941년 학교 선배들과 조선 독립방안을 논의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

포되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여명이 옥고를 치렀고, 지금껏 10여명이 건국훈장 애족장 등을 받았다.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추적해 서훈 신청을 한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3·1절을 맞아 상록회 회원 등 15명을 신청했는데 그중 7명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며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된 이들은 모두 일찍 사망하거나 후손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창선 춘천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선배들에게 개교 100주년을 맞아 명예졸업장을 추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록회는 1937년 조선 독립 투사 양성 훈련을 위해 춘천고 학생들이 만든 항일 비밀 결사조직이다. 이 사건으로 3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20여명이 건국훈장 애족장 등을 받았다. 김여진

江原日報

2024 02 29 ()

04

낙엽·이끼로 가려진 민공호 의병장 이름

민공호 바위·윤희순 생가 등 일부 독립유공자 유적지 방치 관리주체 불분명 지원도 안돼 “지자체 차원 연구·관리 필요”

강원지역 독립운동을 이끈 의병장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올해로 105주년을 맞은 3·1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28일 춘천 북산면 청평사 삼층석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중간 지점에

는 성인 남성만한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바위 표면에는 조선 말기 독립운동가 민공호(閔肯鎬) 의병장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춘천 문화원에 따르면 해당 바위는 민 의병장이 동료 의병들과 춘천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다. 민 의병장은 1908년 2월 순국 직전까지 100차례가 넘는 전투에 앞장선 독립 영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성이 무색할 만큼 바위는 이끼를 머금은 채 낙엽 아래에 뒤덮인 상태였다. 마땅한 안내

판마져 없어 방문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밟거나 지나치기 일쑤였다.

같은 날 방문한 춘천 남면 발산리 소재 윤희순(尹熙順) 의병장 생가. 후손이 물려받아 관리 중이었지만 건물 외벽 곳곳은 깨져 위태로워 보였다. 후손 유모(여·69)씨는 “사유지인 탓에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유족의 노력에도 노후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애국정신이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적절한 관리를 위한 보존단체의 노력도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광복회

강원자치도지부는 지난해부터 보수가 시급한 도내 의병장 유적지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관리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개인 소유지이거나 유적지로 관리 등록이 돼있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은 “도내에는 아직 연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유적지가 많고 관리를 도맡는 후손 대부분이 고령에 접어들어 지자체가 연구 비용과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겸기자 lean@

江原日報

2024 02 29 ()

21

‘주거·육아·일자리’ 청년농업인 살기 좋은 정선 박차

북평면에 공공임대주택 39호 ... 모두랑센터 올해 착공
지역기업 연계 일자리 제공 ... 군 “지방소멸 적극 대응”

【정선】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정선군이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육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까지 인구 감소 원인을 모두 해결하는 대책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국비 45억 원을 포함해 도비와 군비 등 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 군은 지역소

멸기금 62억원까지 더해 총 152억 원을 투자해 정선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39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평리는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편의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보급자리 조성에 가장 안성맞춤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군은 정선형 청년마을 10세대와 청년보급자리 29세대 등 총 39세대의 공공임대 주택을 조성하고, 북평면 종합복지화관을 리

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기로 했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모두랑센터와 연계한 공동 보육시설을 운영, 청년들의 육아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선군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특화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 특산물 홍보 스튜디오 등을 갖춘 크리에이티브 등을 연계해 청년들의 창업·창업을 지원하고, 정선 청년 학교 운영, 지역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에도 총력을 기울이

기로 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정선지역에 청년 귀농·귀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선군을 청년 농업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올림픽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웰니스관광지로 최고의 성장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북평면에 청년농촌보급자리를 조성하겠다”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16

화천군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 탄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무상 산후조리원 등 내실화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 만전
은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박차

‘아이 기르기가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 화천군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돼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포함돼 앞으로 3년간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펼치게 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범지역은 모두 31곳(선도지역 19곳·관리지역 12곳)으로 화천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화천 글로벌 대학 마이크로 캠퍼스 개소 화천군과 한림대학교는 28일 화천 평생학습센터에서 ‘2024 글로벌 대학 마이크로 캠퍼스 개소식’을 가졌다. 김정호

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진행한 교육부 프리젠테이션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등 저출산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교육개혁과제 실현을 통해 ‘아이 기르기가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완성형 은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과 ‘교육과 돌봄, 주거의 패키지

지원을 통한 양육 친화마을 조성과 글로벌 화천 인재육성 방안 등을 제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활용,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군은 시범기간 종료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

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연수 등을 내실화하고 새학기부터 진행할 전국 첫 지자체 주도 은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아이 기르기가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녀 화천교육장도 “화천지역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도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익호

江原日報

2024 02 29 ()

18

안인항 모래 퇴적 현상 ... 어민 수일째 발목여

강릉시 준설작업 역부족 어선 조업 서두르다 파손도
주민 생계위협 호소 ... “화력발전소 가동 후 침식 심화”

【강릉】강릉 안인항 일대의 심각한 모래 퇴적 현상으로 어민들이 수일째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등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28일 강릉 안인항 일대에는 40여척의 어선이 조업활동에 나가지 못한 채 정박돼 있었다. 평소 같으면 도미와 가자미, 광어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최근 항·포구 주변으로 모래가 쌓여 배들이 항구를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 일대 어민 70여명은 지난 주 초부터 조업 활동을 하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가 준설 작업에 나섰지만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실제 이 일대에서 포클레인 5~6대가 6일째 퇴적된 모래를 퍼내고 있지만 운항을 위해 필요한 최소 1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어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급한 마음에



◇28일 강릉 안인항에서 모래가 퇴적돼 어민들이 몇새째 조업을 못하는 가운데 굴착기가 투입돼 항 내에 쌓인 모래를 퍼내고 있다. 강릉=권태영기자

이날 오전 조업을 재개했다가 낮은 수심에 배가 바닥에 걸리며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주민들은 인근의 화력발전

소가 지난해 초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안인해변 모래 침식이 심화됐고, 침식된 모래들이 안인항에 퇴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규 안인진리 어촌계장은 “어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준설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발전소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발전소 측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시 관계자는 “퇴적 원인에 대해 발전소 시설 영향과 자연 현상 등 다각적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빠른 시일 내 준설을 완료하고 조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준·권태영기자

江原日報

2024 02 29 ()

07

수주액 1년새 2조 급감 강원건설 비상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수주액이 평창동계올림픽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자재 값 인상 등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업체들이 체감하는 수주난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현장 기준) 건설수주액은 4조9,147억원으로 2022년(6조9,734억원)과 비교해 2조587억원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두번째로 큰 감소액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기저효과가 발생한 2019년(-8조3,402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4조9,147억원 기록 올림픽 제외 역대 최대 폭 감소
자재값 인상에 업계 체감 수주난 극심 올해도 여파 이어질 듯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18년 도내 건설수주액은 평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11조6,56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가 감소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민간수주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액을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발주액은 2022년(1조2,130억원)의 2배 수준인 2조1,614원을 기록하며 선방한 반면

민간발주액은 5조7,587억원에서 2조7,26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공공발주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지만, 민간발주는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늘어난 SOC 예산을 상쇄할 만큼, 지난해 주택, 근린시설 등 민간시장이 침체됐다는 의미다.

업계는 실제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주난은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해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건설공사비지수는 25.8% 상승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미분양이 늘고,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 민간기업들이 주택, 근린시설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발주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수주가 이듬해 기성액으로 이월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주감소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2024 02 29 ()

09

강원도민일보

지역인재 머무는 '교육도시 춘천' 힘 받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교육생태계·거버넌스 활성화
대학 지역전형 비율 확대 추진
육 시장 "가용자원 총동원 총력"

춘천시가 28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육동한 시장 취임 초창기부터 추진해 온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더욱이 이번 지정으로 지역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추진, 지역 인재들을 지역에 남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도 주목된다.

춘천시가 제시한 모델은 '에듀 포 레스트 춘천'이다. 우수인재로 숲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에 제출한 예산 추정액은 3년 간 500억원 규모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05억원이고 시비 246억원, 교육청과 대학이 각각 27억원과 122억원으로 산출했다. 구체적인 예산은 특구 컨설팅을 거쳐 확정된다.

특구지정을 계기로 춘천시는 지역 인재 정주, 교육생태계 혁신, 교육선택권 확대,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강원대, 한림대와 지역상생 모델을 구축, 지역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나선다. 강원대 의대의 경우 현행 30%에서 내년 60%로, 다른 학과의 경우 현재 14.8%에서 15.2%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의 우수자

원을 초·중·고교에 투입, 교수들이 직접 초·중·고교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춘천형 마을 돌봄인 '우리봄내 동동'은 현재 9곳에서 내년 10곳, 2026년 11곳으로 확대한다. 학생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처한 효제초와 동춘천초교를 대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5분 학습 생활권도 구현한다. 이를 위해 북부공공도서관(가칭)과 작은도서관 3곳 등 현재 도서관 4곳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민선8기 춘천시의 최대 성과다. 춘천시는 민선8기 시정 출범 이후 '최고의 교육도시'를 시정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도시화와 산학협력과로 부서를 개

편, 각각 초·중등 교육과 대학협력을 맡게 했다. 각 부서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교육도시와의 경우 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소관이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육동한 시장은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행정 전문가 60명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도 설치했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제시한 모델은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도 시 전체를 교육도시화 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보배인 아이들을 위해 구슬을 하나씩 꺼내어 시민들과 함께 꿰어보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원주시 통합 돌봄·융합인재 양성 '날개'

2024 02 29 ()

1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내달 아동돌봄지원센터 개소
원주교 자율 공립고 전환 탄력
공공기관 교육클러스터 조성

속보=원주시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본지 1월 17일자 10면 등)에 선정, 돌봄 공백 해소부터 지역 취업까지 원주만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을 크게 '원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 '지역주도 인프라 구축'으로 정했다. 먼저 원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으로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내달 혁신도시에 아동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데 이어 돌봄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아동 돌봄 정보 통합제공은

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청과 협업,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점 돌봄 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우리 동네 놀음학교, 다함께 돌봄 센터를 확충,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원주형 돌봄 지원센터'를 주민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추진, 돌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이어 기존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 융합인재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역 대학, 기업과 협력해 초·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AI 소양 함양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출범하는 원주미래산업진흥원과 더불어 산업별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지역 산업을 선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중심의 교육클러스터 조성으로 혁신도시만의 차별화

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시범지역 지정으로 연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 지원, 각종 규제특례 적용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시는 이를 활용,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기관, 고교, 대학이 연계하는 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관 임직원, 시민이 참여하는 '융합형 대학원' 운영도 계획 중이다.

특히 원주교육청이 추진 중인 원주교 자율형 공립고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 기반 산업인재 육성 거점인 '협약형 특성화 고교' 전환도 지속 추진, 혁신도시민의 교육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원강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인 돌봄과 공교육 혁신이라는 씨앗이 탄탄

한 뿌리를 내려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맞춤형 도시 성장이라는 꽃을 피우는 원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영일 원주교육장은 "원주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조성"이라며 "원주 아이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취업, 원주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김정운 시 사회단체협의회장은 "경제도시로 힘차게 도약 중인 원주시가 교육특구라는 날개를 달아 중부 내륙 최고의 경제·교육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임승범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 의장은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가 원주에 정착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육 경쟁력이 강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혜민

2024 02 29 ()

강원도민일보

14

인제군 향토음식 강화 여름축제 준비 속도

군-더본 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빙어호 연계 먹거리 컨설팅 등
'캠핑과 물' 주제 5~6월 개최

정정 인제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인제빙어축제의 명성을 이어 갈 명품 여름축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제군문화재단(이사장 최상기)과 글로벌 외식기업 더본 외식산업개발원(대표 백종원)은 28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겨울축제원조인 인제빙어축제를 이을 새로운 여름 축제를 앞두고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양측의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축제 먹거리부스 컨설팅과 운영 △외식업 컨설팅·교육 지원 △방송·유튜브를 활용한 행사 홍보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



인제군문화재단과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은 28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상품화 개발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은 2024년 여름축제먹거리부스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 향토음식 판매를 위한 컨설팅과 축제홍보를 비롯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빙어호 여름축제는 오는 5월~6월 중 개최 예정이며, 축제 세부 일정은 3월초쯤 확정되는 가운데 캠핑카·카라반·차박 등 다양한 형태의 캠핑존

을 포함해 빙어호 배경으로 즐기는 수상레포츠,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요리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춘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까지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해 24시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제군문화재단은 지난 1일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브랜드 스노우피크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갖

고, MZ세대를 포함해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의 여름 축제를 위한 선도적 캠핑문화 전개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캠핑과 물'을 주제로 펼쳐질 여름 축제가 열리는 남면 빙어호 일원은 오는 2027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적 복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3만여평 규모의 명품생태하원·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빙어호 일원에 수상체험시설과 호수트레킹코스 조성되면 여름 축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만호 인제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과 음식·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외지 관광객과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원 kwchine@kado.net

2024 02 29 ()

江原日報

17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시동

원주시, 네이버 '1784' 벤치마킹차 방문
AI 신기술·스타트업 육성 등 의견 교환

【원주】원주시가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원강수 시장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 방문단은 28일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 원주형 AI 융합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등 1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됐다. 방문단

은 이날 로보틱스·AI·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살폈다.

원강수 시장은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와 나군호 네이버케어 원장 등을 만나 네이버케어에 활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 AI 신기술과 스타트업 육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 시장은 자리에서 네이버의 고도화한 기술들을 공공부문에 접목해 혁신적인 시정 발전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원강수 시장 등 원주시 방문단이 28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1784'를 찾아 로보틱스 등 미래 신기술을 갖춘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원주 AI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이버의 협력을 당부했다. 네이버 측도 원주형 AI산업 연구개발을 통한 협력을 약속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형 실리

콘밸리 조성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등 공공 부분에 네이버의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11

강릉시 국가산단 예타통과 정부협조 요청

국토부와 규제개선·지원 논의
시, 연내 통과에 행정력 집중
“기업입주 선순환, 일자리 창출”

강릉시가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28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 국가산단의 신속 추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했다.

이 자리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11개 시·도 부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 LH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석, 현재 추



김홍규 강릉시장은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산단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 현안을 논의했다.

진중인 국가산단에 대한 현황 점검과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과제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규 시장은 이날을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LH와 국가

산단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하고 오는 6월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산단 조성의 관건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사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실제 제약회사 등 중견기업 6곳과

중·소기업 120여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서를 제출했다.

이어 대기업과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과 MOU 체결에 나서는 등 기업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부지 확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구정면 금광리 일대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 중이다.

시는 연내 예비타당성 통과와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홍규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업입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 제일 도시 강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13

동해 해군작전헬기장 조성 착수 주민 반발

소음측정협의체 구성 난항 속
해군, 설계·시공업체 입찰공고
송정주민 “도입 자체 강력 반대”
시의원 전원 내달 공식성명 예고

소음측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동해 송정 해군작전헬기장 조성사업에 대해 해군이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앞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자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국군재정관리단은 최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 625억원 규모의 ‘24-N-해상작전헬기 2차 시설사업’을 발주, 오는 3월 14일 동해시 해군1함대 낙산대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해군은 7월 15일 입찰서·기본설계도서 접수에 이어 8월 16일 개찰,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를 발표한다.

해군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25년 3월쯤부터 착공에 들어가, 2년 4개월정도 공사를 진행 2027년 7월쯤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MH-60R 시호크 헬기 10여대를 갖춘 대대급 헬기부대 창설을 위해 추진 중인 헬기장은 동해시 송정동 해안가 일원에 4만 6000여㎡이·착륙장을 비롯해, 승무원이 근무하는 본관, 시물레이터실, 격납고, 관제탑을 갖추게 된다.

해군 관계자는 “소음 측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차례 타진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더 이상 사업 진행 절차를 늦출 수 없어서 업체 선정에 앞서 입찰을 실시했다”며 “객관적인 소음측정과 협의체 구성, 사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들과의 만남과

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민 송정동변영회장은 “소음이 발생하는 헬기장 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소음측정 등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군측이 입찰공고를 한 만큼 이제는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시의회 관계자는 “소음 측정 시물레이션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만들려 했으나 주민과 해군측의 만남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의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3월 15일 성명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 19

원전 안전 예산 삼척 지원 마땅

-한울원전 인근 불구, 행정권 달라 제외 부당

원전 인근 지역에 위치해 방재 활동을 해야 하는 삼척시가, 안전 예산 지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전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큼니다. 삼척시는 자체 예산으로 방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삼척 지역 원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책을 제시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달 초 원자력 시설 반경 30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대해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재지 광역 지자체 몫의 일부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삼척의 경우 경북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원전 인근 22개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원전동맹을 결성한 뒤 원자력 조정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삼척 지역은 그동안 원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별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자

체 예산으로 방공호 설치 및 방독면 배포 등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강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삼척시뿐만 아니라 원전 인접 지역인 대전 유성,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등 자치단체는 광역이다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 사회단체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 '원자력 안전 예산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정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오래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더욱이 10km 옆에 한울원전을 두고 있는 삼척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 등 이산불 영향권에 포함됐을 당시, 삼척 원덕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정부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합니다. 행정구역이다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9 ()

/ 19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신중하길

-의료계 증원 반대 달래기용 안돼, 환자 권리 침해 소지있어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에게 연일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는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 내지 감면하는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달라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공백이 악화되는 중이어서 의대 증원과 패키지로 내놓은 특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의료사고 문제는 증원과 성격이 다른 사회적 사안이므로 연동했을 경우 자칫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는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사항을 비롯해 보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업무에서는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이나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특례법 자체가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처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요지입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으로는 부주의

한 진료나 부실 진료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등 권리 침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행법은 의료사고 발생 때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환자와 유족 등은 의료의 전문성 및 밀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 책임 입증이 어려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특혜를 주는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환자 측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도 특례법 초안에 대해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붕괴되는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 정책으로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사고 문제를 연동했을 경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파생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쓰여선 안 됩니다.

江原日報

2024 02 29 ()

/ 25

반복되는 선거구 확정 논란, 민의 수렴되겠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거리가 돼 오고 있다. 기존 선거구의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분구(分區)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선거구는 손만 댔다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났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 이상이면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구 확정에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 대표성, 선거구 평균 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2012년 2월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선거구 확정

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선거구 설치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선거구 확정 기준의 다면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선거구 확정의 인구 기준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행정적 위상과 지역 대표성 등의 측면을 생각할 때 독립선거구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가 선거구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국회 의석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의 지역구 전환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모두 불발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통선거구’ 탄생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구 확정 없이 출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같은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상설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상설기구가 되면 선거구획정위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통선거구’ 탄생 ‘공포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리당락 변질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 만들어 상설화해야”

선거구획정위의 상설 기구화와 더불어 획정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이 국

회 정개특위에서 정당 간 또는 의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확정 과정이 지연되고 원안이 특정 정당이 나 의원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권한 강화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내지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이 특정 선거구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해당 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권한 강화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리당락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돼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2 29 ()

/ 25

잇단 담뱃불 화재, 실종된 흡연자의 안전 의식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에서는 최근 일어난 횡성군 아파트 화재, 원주시 축사 화재 등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담배꽂초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는 2019년 313건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 374건, 지난해 340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이후에만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로 1명이 사망, 43명이 다치고 58억3,752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급감했지만 증가하는 여성 및 미성년자의 흡연율을 감안하면 여전히 흡연자가 많아 담뱃불 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담뱃불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동반되는 봄철을 앞두고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 통계 작성 이래 국내 최대 규모 피해를 냈던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도 산림청과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담뱃불 실화였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될 정도로 엄중한 산불 재난이 한낱 담배꽂초 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주소방서의 실험 결과 건조한 대기와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낙엽, 종이, 휴지 등의 발화물질에 담뱃불이 닿은 경우 5분 만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때 담배꽂초의 온도는 무려 500도까지 치솟았다. 산림화재 소방안전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간 강원지역의 대형산불은 총 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66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축구장 약 4,400개 규모인 산림 9,128ha가 소실되는 등 2,58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큰 발화 요인은 ‘부주의’로 밝혀졌으며 그중 담뱃불(27.4%)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리 주위에서는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려 불이 나는 일이 허다하다. 야간에는 술에 취해 무심코 흡연안전구역이 아니거나 보행 중에 끄지 않은 담배꽂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달리는 차량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꽂초를 투기하는 사례도 자주 있다. 흡연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건장을 수 없는 사태로 확대되는 것이 담뱃불 화재다. 담배는 안전한 공간에서 피우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 재산상 큰 손실과 함께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